



이동병원 감기환자 북적

2월 기온이 평년에 비해 낮은 날이 많으면서 최근 A형 독감 등 계절성 독감 환자들이 줄을 잇고 있다. 20일 광주시 남구의 한 이동병원에서 독감 증세를 보인 어린이들이 부모와 함께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한미FTA 내달 15일 발효

세계 최대 경제대국 미국과의 관세 없는 무역을 실현하기 위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3월15일 0시 공식 발효된다. 2006년 6월 협상개시 5년8개월만, 2007년 4월 타결 4년10개월만이다. 미국과의 FTA는 침체에 빠진 한국 경제가 '무역강국'을 향해 나아가갈 수 있는 새로운 도약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정치·사회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동북아 지역의 안정에도 적잖은 기여를 할 전망이다. 박태호 외교총장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 오후 8시 외교부 브리핑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한·미 두 나라의 FTA 국내 비준 절차 완료후 진행했던 양국간 협정이행 준비 상황 점검협의가 모두 끝났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작년 7월 유럽연합(EU)에 이어 거대 경제권 두 곳과 모두 FTA를 발효하는 유일한 나라가 됐다. 우리 정부는 작년 11월22일 국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한·미 FTA 비준안이 통과된 뒤 3개월간 화상회의, 대면 회의, 이메일 교환 등을 통해 양국 법률안 등의 발효준비 작업을 벌여왔다. 당초 정부는 올해 1월1일 발효를 목표로 작업을 벌였으나 미국의 연말 연시 휴일, 법률안 번역작업의 지연 등으로 협상이 지연됐다. /연합뉴스

“광주 2·전남 2·전북 2곳 야권연대 몫 무공천 요구”

장원섭 통합진보당 사무총장

4·11 총선을 앞두고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야권연대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통합진보당이 광주와 전남지역 20개 선거구 중 4개 선거구를 야권연대 지역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까지 통합진보당 야권연대 실무협상 대표를 맡았던 장원섭 사무총장은 21일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광주 서구 을 선거구를 비롯한 광주 2곳과 순천을 비롯한 전남 2곳, 전북 2곳 등 이번 총선에서 호남지역 6곳을 야권연대 지역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총장은 “야권연대 협상 속도가 이제부터 빨라질 것”이라며 “오는 25일까지 새누리당이 일부 선거구에 대한 공천을 끝내는 만큼 25일부터 29일 사이에 양당의 야권연대 협상이 집중적으로 이뤄져 늦어도 오는 29일이면 야권연대 지역이 정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야권연대 선정 방식에 대해 “양 당 후보 간 경쟁을 통한 단일후보 선출이나 협상을 통한 선거구 선정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정당 지지율에 따른 선거구 배정은 일단 무산됐다”며 “수도권, 부산·경남권, 대구·경북권, 호남·충청·강원권 등 권역별로 나눠 협상을 통해 지역특성을 감안한 방식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급적 각 당의 전략 선거구는 피하고, 연대를 통해 새누리당 후보와 맞붙을 경우 경쟁력이 높은 선거구를 야권연대 지역으로 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통합진보당은 광주와 전남을 비롯한 호남권에 대한 야권연대 방식으로 민주통합당의 ‘무공천’을 요구하고 있어 민주당 예비후보들의 반발 등 논란이 우려된다. 장 사무총장은 “호남지역 ‘야권연대’라고 하면 무조건 민주통합당이 양보한다고 생각하는 데 (전국적으로 보면) 사실상 민주당의 ‘양보’가 아닌 수십 석의 의석을 늘릴 수 있는 의석 확대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한편, 장 사무총장은 이날 “진보통합과 야권연대를 위해 바친 자의 모든 노력과 피땀을 정권교체로 반드시 꽃 피우겠다”며 광우공산 강철마를 선언했다. /최현배기자 cki@kwangju.co.kr

난제 첩첩...3년차 영암F1 걱정 된다

조직위 인력 절반 이상 감축·개최권료 협상 불투명
여수박람회·런던 올림픽 겹쳐 티켓·스폰서 확보난

올해 열리는 F1(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가 '적자 탈출'의 최대 고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경비 절감을 위해 운영 인력을 대폭 줄였지만 수백억원대 개최권료 및 중계권료 협상은 더디기만 하고, 국내 대기업들의 후원도 여수세계박람회와 런던올림픽 등 대형 국제행사에 쏠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의 비협조와 무관심도 여전히 운영난도 우려된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F1대회조직위원회는 최근 60명의 인원을 35명으로 줄이는 조직 슬림화 작업을 추진했다. '적자 대회'임에도 지나치게 비대하다는 지적에 따라 핵심 업무 중심으로 최소 인원만을 남기는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하지만 올 상반기 목포대교 및 목포~광양간 고속도로가 준공되면서 교통통제나 환승주차장·셔틀버스 운영 등 기존 교통대책을 전면 재수립해야 하는 등 업무량은 예년보다 늘

어나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가뜰이나 적은 인원으로 대회 기간 수백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을 운영·통제·교육해야 하는 점도 부담이다. 전남도가 대회 적자 줄이기를 위한 최대 현안으로 추진했던 '개최권료 및 중계권료 인하' 협상도 가시적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올해 대회를 기준으로 4370만달러(약 490억여원)에 이르는 개최권료와 중계권료(1390만달러)를 그대로 내야 하는 등 정확한 협상 결

과는 아직도 안갯속이다. 협상이 지지부진하면서 대회조직위원회는 지난달 전남도의회 임시회에 상정, 처리하려면 신용장 개설을 연기한 상황이다. 여기에 올 대회비용(900억) 중 예초 목표로했던 정부 예산(300억)은 50억만 반영됐고, 그나마 자체적으로 확보하려던 운영비 150억원도 90억 원만 책정된 상황이라서 '돈 가뭄'에 시달릴 형편이다. 더 큰 문제는 여수세계박람회(5~8월)와 런던올림픽(8월) 등으로 F1 대회 티켓·후원 마케팅에 자원이 빗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과 현 정부에서 가장 큰 국제행사인

여수세계박람회를 소홀히 할 수 없는 데다, 경기가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후원 규모를 늘리거나 다양화하기도 힘든 게 현실이다. 국내 기업들의 F1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낮은 것을 고려하면 결국 후원 몰림상이 두드러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지난해 F1 대회의 스폰서 수입은 32억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전남도 안팎에서 F1 대회가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는 대회로 거듭나느냐, '돈 먹는 하마'로 남느냐에 달렸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이번 총선만 의석수 300석으로”

선관위 선거구 획정 중재안 제시
여야 수용땀 구공담 지역구 유지

여야의 4·11 총선 선거구 획정 논의가 성과를 내지 못한 채 갈광갈광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1일 국회를 방문해 이번 총선에 한해 국회의원 수를 현재의 299석보다 1석 많은 300석으로 늘리는 대안을 제시했다. <관련기사 3면> 이종우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를 방문해 황우여 새누리당·김진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와 면담하고 '국회의원 정수를 19대 총선에서만 임시로 세종시 지역구 1석을 추가하는 선에서 결정하자'는 내용의 중재안을 담은 서한을 전달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를 위해 국회의원 정수를 299석으로 정한 공직선거법 21조에 특례부칙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여차피 2년 뒤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선거구 획정 논의가 다시 진행돼야 하는 만큼 규정을 뒀 문제를 일시적으로 봉합하자는 것이다. 선관위는 또 선거 때마다 정당의 이

해관계에 따라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국회에서 독립시켜 상설 기구화하자고 제안했다. 여야는 선관위의 이 같은 안에 대해 일단 부정적 입장을 취하면서도 "당내에서 논의해 보겠다"고 밝힌 극적 타결의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중재안의 의미에 대한 각각 해석이 달라 이날 하루 정치권은 혼란스러웠다. 일부에서는 현 지역구를 그대로 둔 채 세종시 지역구만 증설하면 된다는 안으로 해석하는가 하면, 다른 쪽에서는 세종시 문제만 의석수를 늘리는 것으로 대안을 찾아준 것일 뿐 그대로 두면 위험소지가 있는 광주와 원주는 결국 분구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2석은 줄여야 한다고 해석했다. 전자의 해석대로 여야가 합의할 경우, 담양·곡성·구례 선거구는 유지되지만 후자의 경우는 폐지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민주통합당 김재두 담양·곡성·구례 예비후보는 "농촌 지역구를 살리기 위해 정치권은 선관위 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선관위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여야가 자기희생은 없이 '밥그릇 지키기'에 급급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은 22일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어 선거구 획정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교육과학기술부 인증
광주일보와 함께하는
방과후교사(양성과정) 모집

과 정	모집인원	과 정	모집인원
신문활용 논술교실	각 30명	창의적 미술교실	각 20명
사진활용 학습교실			
자기주도 학습교실			
원어민참여 영어교실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 정책)			
포트폴리오 준비를 위한 교과목 동시 자격증(토요일을 위한, 창의적 체험활동 지도사+자기주도적 학습 지도사+진로탐색상담사)		즐거운 체육교실	
		즐거운 한자교실	
			20명

접수기간 : 2012년 2월 6일(월) ~ 2월 24일(금)

- 모집대상 : 전문대 졸업자 / 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해당분야 전공자
- 교육기간 : 2012년 2월 27일(월)~3월 5일(토)까지
- 교육시간 : 매일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 수강료 : 29만원(자격증 비용 별도)
- 접수방법 : 알리오TV(www.alio.tv.kr) 홈페이지 참조
- 활동지역 : 광주광역시 · 전라남도
- 특 전 : 1. 광주일보 수료증 발급
2. 성적우수자 초·중고 방과후 교사 취업 우선지원
3. 수료시험 이후 방과후 교사 자격증 수여

※ 자격취득 후 진로 : 창업지원, 방과후교사, 문화센터, 복지관, 주민자치센터지역아동센터 강사 등으로 취업하실 수 있습니다.

주최 : 63 광주일보사 주관 : ADEC 광주일보사 교육법인 (주)아 데 크

문의전화 062-220-0555 H.P 018-693-6604

시도교육청 기구·정원 자율 결정

내년부터 총액인건비제 전면 시행

내년부터 모든 시·도 교육청이 지방공무원 정원과 행정기구 설치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모든 시도 교육청이 인건비 한도 내에서 행정기구 설치와 지방공무원 인력 규모 등을 자율적으로 조정·결정하는 '총액인건비제'가 전면 시행된다. 종전에는 교과부가 교육청의 정원·기구를 일률적으로 정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교과부 장관의 권한이던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권 등 중앙통제가 폐지된다. 교육감이 예산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총 정원과 직급별 정원을 결정하고 '과' 단위 행정기구도 설치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기구·감사 업무를 맡는 교육청 과장의 직급을 현행 4급에서 3·4급으로 상향했다. 개정안은 총액인건비제가 조직 편성, 인사적체 해소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의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해 총정원 및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하고 기구·정원 관련 규칙의 제·개정안과 인력운용 계획을 의회에 보고토록 했다. 총액인건비제는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년 간 전남과 부산, 대구, 충남 등 4곳의 시·도교육청에서 시범 운영됐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007년부터 이 제도를 전면 도입해 운영 중이다. /연합뉴스

광신대학교
학부정시 추가모집
2월24일(금)~27일(월)
입학 문의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ABC협회 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